

54년경도의 하안의 간헐기에 공토장 건설을
위한 추진책으로 보인다.

임시적인 생기기때 여간 세수가 8150억원으로 느려날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0개의 공토장을 신설하는 경우 27조 2000억원의 경기진작효과가 발생할것을
주장하며 공토장중심의 건설경기진작 → 임시회향후 → 지역경제활성화 → 세수증대
가 이루어진다고 36부의 공토장건설경기부양책을 거론하고 있다. 부지들의 지압을 열게
해서 24부의 경제회기적 극복해 보려는것이 36부의 의도인것 같다. 36부는 사회호기

이때 대한 토지주택정책의 목적은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공토장 확대정책은
국토를 복토로 하고 있어서 토지개발 없는 대지양을 물고 잡수로 잇는 것이다. 경제력
향상의 책으로 담지하고 있다. 18월기준으로 2000년 500억원의 건설비용이 드는데
36부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고비용은 임종각으로 160~200억원이라 특수하게 18월이라는
경기세수로 들어오는 세입은 불과 5억원 36조이고 230개의 공토장 건설을 보루
해나갈 경우 추후되는 것은 12조원 가량 된다고 한다. 이렇 국내 공토장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치가 미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에 100여개의 공토장
공급 리얼 상태에 매개체 된다는 예측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들의 공토장이 화두를 보양해 공내를 조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화두전 가격 폭락의 공토장만 및 공토장 도산사태로 이어질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의 싹을 잡히수로 잇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이후 내수확대정책의
입찰으로 공토장건설비가 뛰어났는데 90년대 초 불황이 위해 공토장이 연쇄되는
한 경제에서 매개체가 잇는것 같다.

우리의 경제회기가 위화되기때 불리해 여태되고 있다. 위계정부의 정책은 모택
트이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부지들의 주머니 공이 풀리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임시방편적인 단기부양책이고 대중소비정책인데
머물고 잇는 것이다. 민생경제를 대수리할수 잇는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은
잇는것인가? 더구나 국토를 복토로 하는 공토장 확대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배고고 양젖물을 먹히는 잇는것이 아닌가?

골프경기 부양책 논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지난 7월 19일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현재 접수된 230건의 골프장 신청 건을 4개월 안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여 조기에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같은 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재정부 계획안보다 더 많은 골프장 건설 방안을 내놓았다. 8월 30일에는 전라북도가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부안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지역에 정규홀(18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는 540홀짜리(800만평) 골프장이 포함된 2000만평 규모의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 때 머드 골프장이 건설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광둥성에 있는 180홀 규모의 “미션힐스 골프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골프장이 되는 것이다.

“골프는 이미 중산층 스포츠가 되어있다”고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가 말하는 가운데 사치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소비세가 28년 만에 폐지되면서 골프에 대한 특소세도 없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골프장 입장행위에 따르는 각종 세 부담 면제와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보유(한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타 시도의 골프장에도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10월 중순부터 도시근교에 미니골프장(6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기준완화에 관한 입법예고를 8월 1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골프장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나라 130~400만을 헤아리고 있는 골프애호가들의 천국이 오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62개(운영중 181개, 건설중 68개, 미착공 13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미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며 앞으로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되는데 따라 이러한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골프장 건설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산림훼손, 지하수고갈, 농약피해, 소수 특수층을 위한 시설임에 따른 사회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 환경과 국토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단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절토 또는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이 극심하다. 그리고 골프장은 적당한 습도와 매우 우수한 배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6층에서 7층 정도로 토양과 자갈을 반복적으로 적층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토양층을 그린에 깔며, 이 그린은 제초제와 살충제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약품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 골프장은 잔디 이외의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녹색사막인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을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골프에 올인하는 것은 골프장확대정책을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오늘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이유에서라 한다. 3~4년 걸리던 인허가 절차를 축소하여 골프장 수를 대폭 늘리는 경우 해외로 나가는 50만명 정도의 국내 골프관광객이 해외에서 쓰는 5000~6000억 원을 내수진작에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골프장 대량건설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골프장이 완공되면 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연간 세수가 8750억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0개의 골프장을

신설하는 경우 27조 2000억 원의 경기진작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골프장 증설을 통해 건설경기진작→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세수증대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부의 골프장 건설경기부양론을 거두고 있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정부는 시화호와 새만금 등의 해안 간척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는 경기부양론으로서의 골프장 확대정책은 국토를 불모로 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의 측정도 달리하고 있다. 18홀 기준으로 평균 500억 원의 건설비용이 드는데 반해 창출되는 고용효과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용직을 포함하여 160~200명에 그치며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우 세수는 불과 5억 원 정도이고 230개의 골프장 건설을 모두 허가하는 경우 유통되는 돈은 12조 원가량 된다고 한다. 아직 국내 골프장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에 이르면 100여개의 골프장이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회원권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공사 중단 및 골프장 도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이래 내수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 붐이 일어났으나 90년대 초 불황으로 인해 골프장이 연쇄 도산한 선례가 있다.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제현실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위기극복의 모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정부가 부자들의 주머니 끈을 풀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임시방편적인 단기부양책이자 대중요법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본대책은 없는 것인가? 더구나 국토를 불모로 하는 골프장 확대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배고프다고 양젖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12. 8. 24

골프경기 부양책 논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지난 7월 19일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현재 접수된 230건의 골프장 신청 건을 4개월 안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여 조기에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날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재정부 계획안보다 더 많은 골프장 건설 방안을 내놓았다. 8월 30일에는 전라북도가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무안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지역에 정규홀(18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는 540홀짜리(800만평) 골프장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 때 머드 골프장이 건설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광둥성에 있는 180홀 규모의 “미션힐스 골프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골프장이 되는 것이다.

“골프는 이미 중산층 스포츠가 되어있다”고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가 말하는 가운데 사치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소비세가 28년 만에 폐지되면서 골프용품에 대한 특소세도 없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골프장 입장행위에 따르는 각종 세 부담 면제와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보유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타 시도의 골프장에도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10월 중순부터 도시간 교에 미니골프장(6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기준완화에 관한 입법예고를 8월 18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골프장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나라 130~400만을 헤아리고 있는 골프애호가들의 천국이 오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62개(운영중 181개, 건설중 68개, 미착공 13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미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다.

지금까지 골프장 건설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산림훼손, 지하수고갈, 농약피해, 사회위화감조성 등, 환경과 국토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골프장건설은 절토 또는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이 극심하다. 그리고 골프장은 적당한 습도와 우수한 배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6층에서 7층 정도로 토양과 자갈을 반복적으로 적층하여 인위적인 토양층이 만들어지며, 이 그린은 제초제와 살충제로 관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약품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 골프장은 잔디 이외의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녹색사막인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을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골프에 올인하는 것은 골프장확대정책을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오늘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3~4년 걸리던 인허가 절차를 축소하여 골프장 수를 대폭 늘리는 경우 해외로 나가는 50만명 정도의 국내 골프관광객이 해외에서 쓰는 5000~6000억 원을 내수진작에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골프장 대량건설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골프장이 완공되면 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연간 세수가 8750억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정부는 시화호와 새만금 등의 해안 간척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는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골프장 확대정책은 국토를 볼모로 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의 측정

도 달리하고 있다. 18홀 기준으로 평균 500억 원의 건설비용이 드는데 반해 창출되는 고용 효과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용직을 포함하여 160~200명에 그치며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우 세수는 불과 5억 원 정도이고 230개의 골프장 건설을 모두 허가하는 경우 유통되는 돈은 12조 원가량 된다고 한다. 아직 국내 골프장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에 이르면 100여개의 골프장이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회원권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공사 중단 및 골프장 도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이래 내수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 붐이 일어났으나 90년대 초 불황으로 인해 골프장이 연쇄 도산한 선례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제현실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위기극복의 묘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정부가 부자들의 주머니 끈을 풀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임시방편적인 단기부양책이자 대중요법에 머물고 있다.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본대책은 없는 것인가? 배고프다고 양젖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골프경기 부양책 논란

10.6.24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지난 7월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현재 접수된 230건의 골프장 신청 건을 4개월 안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여 조기에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8월 30일에는 전라북도가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그곳에 정규홀(18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는 540홀짜리(800만평) 골프장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 매머드 골프장이 건설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광둥성에 있는 180홀 규모의 “미션힐스 골프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골프장이 되는 것이다.

“골프는 이미 중산층 스포츠가 되었다”고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가 말하는 가운데 사치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면서 골프용품에 대한 특소세도 없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골프장 입장행위에 따르는 각종 세 부담 면제와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및 보유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타 시도 의 골프장에도 준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골프장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나라 130~400만을 헤아리고 있는 골프애호가들의 천국이 오는 것 같다. 30만명 이상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62개(운영중 181개, 건설중 68개, 미착공 13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미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다.

지금까지 골프장 건설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산림훼손, 지하수고갈, 농약피해, 사회위화감 조성 등, 환경과 국토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골프장건설은 절토 또는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이 극심하다. 그리고 골프장은 적당한 습도와 우수한 배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6층에서 7층 정도로 토양과 자갈을 반복적으로 적층하여 인위적인 토양층이 만들어지며, 이 그린은 제초제와 살충제로 관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약품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 골프장은 잔디 이외의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녹색사막”인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을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골프에 올인하는 것은 골프장확대정책을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오늘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골프장 수를 대폭 늘리는 경우 해외로 나가는 50만명 정도의 국내 골프관광객이 해외에서 쓰는 5000~6000억 원을 내수진작에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골프장 대량건설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골프장이 완공되면 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연간 세수가 8750억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것이다. 정부는 시화호와 새만금 등의 해안 간척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략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골프장 확대정책은 국토를 불모로 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 골프장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에 이르면 100여개의 골프장이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42년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회원권의 가

격이 폭락하게 되면 공사 중단 및 골프장 도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이래 내수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 붐이 일어났으나 90년대 초 불황으로 인해 골프장이 연쇄 도산한 선례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다.

우리의 경제현실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위기극복의 묘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정부가 부자들의 주머니 끈을 풀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임시방편적인 단기부양책이자 대중요법에 머물고 있다.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본대책은 없는 것인가? 배고프다고 양젓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불황극복을 위한

Final ①

골프경기 부양책 논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지난 7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현재 접수된 230건의 골프장 신청 건을 4개월 안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여 조기에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8월 30일에는 전라북도가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그곳에 정규홀(18홀) 골프장 30개에 해당하는 540홀짜리(800만평) 골프장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 매머드 골프장이 건설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광둥성에 있는 180홀 규모의 “미션힐스 골프장”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골프장이 되는 것이다.

“골프는 이미 중산층 스포츠가 되었다”고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가 말하는 가운데 사치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면서 골프용품에 대한 특소세도 없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골프장 입장행위에 따르는 각종 세 부담 면제와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및 보유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골프장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 나라 130~400만을 헤아리고 있는 골프애호가들의 천국이 오는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62개(운영중 181개, 건설중 68개, 미착공 13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미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다.

지금까지 골프장 건설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산림훼손, 지하수고갈, 농약피해, 사회위화감조성 등, 환경과 국토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골프장건설은 절토 또는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훼손이 극심하다. 그리고 골프장은 적당한 습도와 우수한 배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6층에서 7층 정도로 토양과 자갈을 반복적으로 적층하여 인위적인 토양층이 만들어지며, 이 그린은 제초제와 살충제로 관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약품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 골프장은 잔디 이외의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녹색사막인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을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가 골프에 올인하는 것은 골프장확대정책을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내수를 진작시킴으로써 오늘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골프장 수를 대폭 늘리는 경우 해외로 나가는 50만명 정도의 국내 골프관광객이 해외에서 쓰는 5000~6000억 원을 내수진작에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골프장 대량건설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골프장이 완공되면 5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연간 세수가 8750억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것이다. 정부는 시화호와 새만금 등의 해안 간척지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골프장 확대정책은 국토생태를 불모로 하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 골프장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10년에 이르면 100여개의 골프장이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회원권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공사 중단 및 골프장 도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의 발목

을 잡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이래 내수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골프장 건설 붐이 일어났으나 90년대 초 불황으로 인해 골프장이 연쇄 도산한 선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

우리의 경제현실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위기극복의 묘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정부가 부자들의 주머니 끈을 풀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임시방편적인 단기부양책이자 대중요법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본대책은 없는 것인가? 배고프다고 양젓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